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정부는 800만 달러 대북인도적 지원을 철회하라!**

주 관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박상학),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구금 탈북민 가족들

주 제 : 재중 탈북자 강제복송 및 대북지원 800만 달러 반대 기자회견

일 시 : 2017. 9. 22.(금) 11:00

장 소 : 주한 중국 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통일부

1.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7월 중순 북한 지방 노동당 간부 가족 5명이 집단자살 한 외에도 7월 하순경 3명의 탈북자 가족이 또 집단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송되었거나 강제복송되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8월 중순경까지 파악된 숫자만 하여도 양강도 헤산 보위부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이 복송되어 있다.
2. 우리는 지난 8월 1일 UN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구조요청(urgent appeal)을 보내고 수차 주한 중국대사관에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8월 9일, 9월 4일 직접 중국대사관 앞에서 방문요청 및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복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3.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으로서,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을 복송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는 살인방조와 같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이미 2014년 그 불법성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4. 이에 우리는 다시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강제복송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중국 정부가 계속 이를 외면할 경우, 이는 유엔총회(A/RES/60/251)에서 말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suspend) 및 별첨 사진과 같은 탈북가족상 건립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 운동에는 미국의 Suzanne Scholte 여사(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대표)도 함께 할 것이다.
5. 그런데 헌법상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는 한국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우리는 한국 외교부도 재중 탈북민 구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편 이 와중에 통일부가 대북인도지원으로 800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7. 9. 22.

첨부 사진: 탈북가족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중국 구금 탈북민 가족들